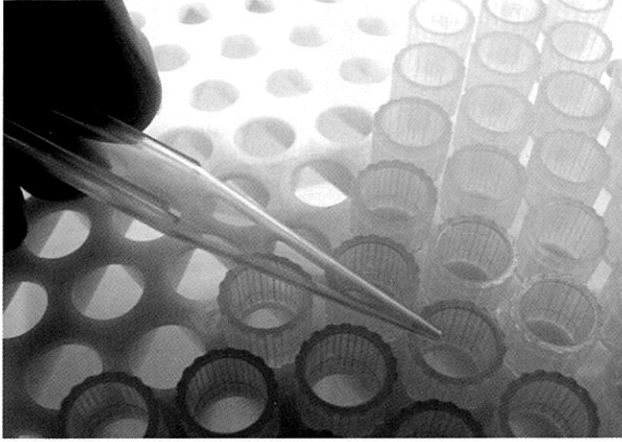




19개 출연연, 국과위 소속 단일 법인으로 통합

글 임인재 객원기자 mimohhh@naver.com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통폐합 방향이 결정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 12월 14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출연연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출연연 27곳 중 19곳이 국과위 소속으로 단일 통합되며 나머지 8곳은 특성을 고려해 관계부처로 이관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9년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비판 받은 출연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데 의의가 있다. '컨막이 연구'로 분산돼 온 연구개발(R&D)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27곳 모두를 한꺼번에 통합하지 못했고 이후 통합 과정에 과학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출연연 27곳 중 19곳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

27곳의 출연연 중 19곳은 국과위 산하 단일 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가칭)으로 묶이게 된다. 나머지 8개 기관은 부처 직할 체제로 전환된다. 출연연 중 최대 규모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식경제부 잔류가 결정됐다. 지금까지 출연연을 이끌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연구회는 폐지된다. 이로써 전체 인원 4천800명의 거대한 한 연구조직이 탄생하게 됐다.

통합되는 출연연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과학기술연구원(KIST),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초과학지

원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핵융합연구소 등 11개 기관과 지식경제부 소속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철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지질연구원, 안전선연구소 등 8개 기관이다. 다만 해양연구원은 해양대와의 통합 법인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법인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출연연은 농업식품부(한국식품연구원, 김치연구소), 지식경제부(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안연구원), 국토해양부(건설기술연구원) 소속이 된다.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한 수리과학연구소와 천문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설기관으로 이관된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출연연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과위 소속 단일 법인으로 통합되는 출연연은 정부나 국과위 입김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단일 법인이 출범하더라도 개별 출연연의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최우선적으로 국가개발연구원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도록 원장파 이사회, 평가제도 등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단일 법인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의 차관이 포함된 이사회가 구성되며 국가개발연구원은 이 이사회를 통해 기관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또 출연연 평가는 국과위가 아닌 외부 전문 평가단이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각 연구원의 독립성을 잃는 단일 법인이 아니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유럽연합식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원이 출범하면 출연연 간의 이동은 자유롭게 되며 이것만으로도 융합 연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과위 이석래 정책조정과장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지적됐던 출연연이 이번 통합을 계기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출연연들은 그동안 그들만의 '컨막이 문화'가 심해 중복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단기과제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이 대전 특구본부에서 출연연 기관장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연연 통합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포토)

의 성과내기에 바꿨는데 이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논란은 그대로

하지만 ETRI의 지식경제부 잔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당초 출연연 개편안에는 ETRI를 포함, 20개 기관이 통합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ETRI가 지식경제부 산하에 남게 되면서 국가연구개발원 소속은 19곳으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IT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ETRI는 지식경제부에 남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석래 과장은 "이번 개편안이 연구원을 융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IT와 산업을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며 "ETRI가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식경제부에 남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ETRI의 한해 예산은 6천억 원인데 이 중 70%를 지식경제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ETRI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연구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ETRI가 단일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 출연연 개편방안은 '반쪽 개편안'이라는 주장이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

합 이석우 위원장은 "ETRI는 정규직원이 1천800명, 한해 예산이 6천억 원이다. 출연연 중 최대 규모인 ETRI가 통합대상에 빠진다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통합"이라면서 "전체 출연연 3분의 1인 8개 기관이 여전히 부처 산하에 남게 됐는데 이는 출연연 재편문제가 다음 정권에서 재논의되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이하 출연연발전협, 회장 정정훈)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부처 직할로 이관되는 8개 연구기관도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과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연 위원장은 "과학기술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2~3년에 걸쳐 모든 출연연의 성격 및 특징을 '가장 효율적'이라고 내린 결론이 19곳은 통합, 8곳은 관련 부처이관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데...

그렇다면 개편 방안이 적용된 후의 출연연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 국과위에 따르면 우선 급작스러운 변화는 없다. 그리고 개별 출연연의 해체에 따른 급격한 변동 등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기간이 주어진다. 경과조

치 기간 중 출연연의 원장들은 인사, 조직권을 독립적으로 보유하게 되며, 원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일법인 출범 후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신규 원장의 선임 없이 단일법인 원장이 겸임 혹은 위임 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개별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유예기간 중에는 단일 법인의 기능은 제한된다. 유예기간 중 법인은 사실상 기존 연구회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국과위 김차동 상임위원은 “단일법인 출범 후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직원들은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흡수될 것”이라며 “19곳의 출연연이 통합된 후 중복투자, 중복연구에 대한 조정은 있어도 이에 따른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 수급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연연의 정원은 정해져 있었고 출연연 간의 인재 교류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단일법인이 되면 출연연 간 인재



교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중요한 연구 분야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연구기반 강화 정책도 같이 추진해야

출연연의 일선 연구원들은 “국과위는 단일 법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들을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연연의 A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은 연구원 간의 벽을 허물고 기술 간 융합(IT, NT, BT, CT 등)을 통해 융합원천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과위 위상이 강화돼야 하고 더 나아가 국과위가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출연연의 B연구원은 “ETRI 등 거대 연구소가 빠져 나가면 국과위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과학기술계에서 통합은 매우 어렵다. 2, 3개 기관만 통합하려해도 시끄러운데 19개 기관을 하루아침에 합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일시적인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며 2013년 총선, 대선을 고려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출연연의 단일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연연발전협은 “법인 개편은 출연연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 브랜드와 연구의 자율성, 연속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연구 몰입환경을 위한 연구과제중심(PBS)제도 개선, 연구원 정년 환원 및 신진 연구자의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의 연구기반 강화 정책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T**

